



대선 후보들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한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드디어 3월 9일(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를 남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하여 특이점이 너무 많은 선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0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권력 중심부에 있지 않았던 경기도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비주류, 변두리 아웃사이더 출신들이다. 두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와 아들까지 고소, 고발되는 피의자, 피고소인이 되어 있다. 3월 4일, 사전투표 첫째날에 두 양강(兩強) 후보들이 부인과 함께 투표하는 관례를 깨고 후보 혼자서 투표했다.

사전 투표 하루 전, 3월 3일 야권 후보 단일화(單一化)를 앞둔다고, 안철수(徹收)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며칠 전에도 안 후보는 '자격없는 후보(윤석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강한 완주(完走) 의사를 피력했다.

지지자들에게도 배신, 국민 기간, 정치 불신,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된 철수 전문가가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2012년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2022년 이번 20대 대선 철수까지

네 차례여서 4철수라고 부른다. 투표일이 이를 남은 현재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다. 후보들의 공약은 투표일에 가까이 오면서 비슷해지고 있다. 앞으로 5년 간 국민 삶과 국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와 민생, 복지와 국방 등 공약은 비슷하다. 자유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를 안 하겠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그런 국민도 없다. 사드 추가배치와 선제타격 같은 말이나 공약은 전쟁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질리도록 보고 당했지 않는가.

그러나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차이가 크다. 나는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통일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파나 지역, 진보와 보수, 세대와 이념을 떠나서 양식(良識)과 지성(知性)을 다해서 주장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 주석 시대 김영주 노동당 조지지도부장이 상부의 명을 받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992년 노태우 대통령 시대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에 필요하고 좋은 것의 합의와 선언은 차고 넘친다.

1970년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20여년 일관되게 지속하여 1990년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 콜 수상이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족 최대 과제인 통일정책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고, 싸꾸오이(후진, 역진)해서는 통일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주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 공하면서 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 적성국가이고 원조 공산국가, 핵 초강대국 러시아와 핵 감축이나 비핵화라는 말 한 마디 없이 한·러수교(修交)를 했다. 아직도 30억불 차관을 전부 상환 받지 못했음을 외교부에 확인했다. 1992년에는 6·25 한국전쟁 때 인해(人海) 전술 인민해방군으로 참전하여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던 적성 공산국가, 핵 강국 중국과 한·중수교를 했다.

북한은 자기들의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니, 한국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평화협정 체결)를 지금까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저절당하고 있다. 고립감

과 생존에 위협을 느껴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미사일과 핵을 먼저 포기하라(비핵화)고 절대적인 약속국가 북한을 국제적인 제재를 수십년 가하고 있다.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하면 시험이고, 북한이 발사하면 도발이라고 규탄한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해도, 문제는 제재 완화의 철회는 쉬우나, 핵 시설 폐기의 회복은 어렵다. 오랜 기간 일관성있는 교류협력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무슨 선언이나 합의는 휴지 조각임을 역사가 냉혹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결론을 말한다. 첫째, 민족문제, 통일문제의 당사자·주인공으로서 무조건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호 협력관계 국가다. 가난한 북한을 인도적인 정신으로 30억불 장기 차관을 제공해 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절대적인 약자인 북한에 대하여 가하고 있는 유엔 등의 모든 제재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 통일비용으로 생각하고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통일 후의 이익은 엄청나다. 셋째, 북한 핵이 한·미동맹의 핵 우산과 군사력으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위협적 존재이면, 우리도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이나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남북문제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70년, 100년을 길등과 대립의 세계 유일의 부끄러운 분단국가로 남을 것이다.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화해협력의 큰 길로 담대하게 펼쳐 나셔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고, 통일로 가는 큰 길이다.

칼럼

“광주 군 공항이전으로 예견되는 갈등은 어찌 할까”

기고

송남수 무안망운면변영회장



건설은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대양해군건설 및 제주남방지역 안전과 전력송전이 그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공시설의 입지과정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부안 방폐장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의 사례는 정부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행정패턴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및 건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군사시설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극심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마저도 정책대상 집단의 이해관계는 물론 가장 넓은 의미의 '주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갈등사례를 보자. 먼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다.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민과 '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지역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두개의 갈등이 대립한 사례다. 처음에는 민·관 갈등에서 찬성과 반대가 격렬히 대립하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해 제주도 전역의 갈등으로 증폭된 사건이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사례를 보자. 한전이 신고리 원전 1,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북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5,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과 한전의 가장 중요한 갈등 원인은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주민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공권력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밀양송전탑

그럼 광주군공항의 이전 명분은 무엇인가? 광주광역시 "엄청난 소음 피해 때문에 150만 광주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그럼 이전가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국내 최초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총복 청주시 군용기 항공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는데 군용항공기 소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우리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군 공항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무안군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는 공약에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에 더 많은 국제선 개설, 그리고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고, 야권 후보자 또한, 광주에서 7개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중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선 후보자 모두 군 공항 이전을 연계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광역시의 발표대로 이전후보지역에 지역개발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창출 등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면,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서는 후보들은 본인들의 고향으로 광주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할 용기는 있는지 묻고 싶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전 부스터샷으로 산업시설 재해를 대비합시다

기고

김재승 함평소방서장

새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활기차야 할 한 해의 시작부터 지역 곳곳에서 화재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위험물 탱크화재부터 시작해 최근 2월 나주 페인트창고 화재까지 인명·재산피해가 막대한 산업시설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달

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장, 산업시설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대비 2017년 10.9%에서 2021년은 11.2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위험이 잠재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인 실수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이 있을까?

먼저 주기적인 장비 점검을 시행하며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사용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기 때문

에 수시로 장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작업 후 가스통이나 화학물질은 작업장과 별도로 장소에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에는 가스·산소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통해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 불티는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



포 등을 비치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근로자들과 관계인의 화재 예방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자칫 부주의로 인해 사소한 원인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수칙들을 항상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있지만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사소한 결함을 찾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듯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재난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